

한미 정상 긴급 통화... 쇠고기 난국 풀리나

7일 저녁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에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가 수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쇠고기 정국에 돌파구가 열릴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지난 3일 우리 정부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중단 요청에 백악관이 '우리'를 표명했던 것에 비하면 미국 측이 한국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아래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美 '30개월 구분표시' 가능성=8일 정부 당국과 민간업계에 따르면 전날 양국 정상간 통화에서 한 부시 대통령의 약속을 미국 측이 지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30개월이상 쇠고기의 한국 수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30개

부시 "30개월 수출 안되게" 약속 불구 양국 업계 결의가 관건

이력 추적시스템 허술, 원천 차단 불가능...野 "미봉책" 시큰둥

월 기준의 월령표시(라벨링)를 통해 한국 수입업자가 30개월 미만만 끌라가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쇠고기 수출업계를 설득해 한국행 쇠고기에 모두 30개월 이상 월령 구분표시(라벨링)를 하도록 지도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이끌어내는 수준의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미국 쇠고기 업체들이 월령 구분

표시와 '30개월 이상'의 대(對)한 수출 자율규제에 동의한다고 해도 미국 측이 이력 추적 시스템을 완전히 갖춘 게 아니고 우리 측이 도축장 승인권이나 조사권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30개월 이상'의 반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정부도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사실상의 강제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 '30개월 이상'이나 월령 구분표시가 없는 쇠고기는 검역 과정에서 반송

또는 폐기하는 방안이다.

◇양국업계 결의가 분수령=청와대와 정부는 그간 "재협상은 없다"고 거듭 선을 그으면서도 한미간의 쇠고기 협의결과에 "재협상에 가까운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특히, 부시 대통령의 전화 약속에 따라 현재 양국 정부 지원 하에 쇠고기 수출·수입업계가 추진하는 자율결의가 추진되고 있어 조만간 '재협상에 가까운 내용'의 구

체적 형태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국 업계의 결의가 있더라도 오는 10일을 전후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춧발집회' 등의 반발기류가 빠른 속도로 수그러들 것으로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자율규제'가 기본적으로 재협상을 통해 수입위생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는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지 여전히 의문이기 때문이다.

'재협상'을 등원조건으로 제시한 통합민주당 등 야당 역시 청와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전화 약속 내용을 밝히는데 대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면서 즉각 재협상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현장과 시각

대통령 측근들의 상황 인식



임동욱

서울 취재팀장

한미 쇠고기 협상 파문으로 출범 100일을 갓 지난 이명박 정권이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연일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내며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의 지난 5일 발언은 심각하다. 또 예배에서 그가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 독을 주겠느냐"고 말한 것은 이 대통령을 아버지, 국민을 자식에 비유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힐난한 것이다.

또 그가 "사탄의 무리들이 이 땅에 판을 치지 못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한 것은 춧발집회 국민을 사탄의 무리로 비유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어서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의 현 사태에 대한 인식이 이렇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여기에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장으로 내정된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은 7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의 관련 사실이 왜곡됐으며 춧발 시위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홍 내정자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북 정책을 '굴종적'이라고 비판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용공 이적문서'라고 폄하한 것은 물론 흡수통일을 주장해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또 한 차례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 대통령의 인사실배 원인에 대해 "대통령 주변 일부 인사에 의한 권력의 사유화"라고 지적하며 청와대 일부 인사들을 '간신', '음해 모략의 명수' 등으로 원색 비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이 지목한 인사로 꼽히는 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은 8일 "정두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실 무근이며 인격살인 행위의 비열한 짓"이라고 반발하면서 사태는 여권 내부의 권력 투쟁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 같은 여권 내부의 모습은 이명박 정부가 왜 출범 100일 만에 최악의 위기에 빠졌는가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시대적 흐름을 보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거나 정권 획득에 따른 밥그릇 싸움에만 열중하면서 결국 민심이 떠나고 국민들이 춧발을 들고 거리로 나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는 앞으로 4년9개월이나 남았다.

이명박 정권이 쇠고기 정국의 위기를 넘어 순항하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고 대폭적인 인적쇄신을 통해 국정난맥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tuim@kwangju.co.kr

정부 "30개월 이상 안 받는다" 배수진

정부는 지난 4월 18일 타결된 새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검역 과정에서 30개월이상 쇠고기를 반송·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실상의 재협상과 마찬가지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발언이나 정준용 농식품부 장관의 "재협상이든 자율결의든 방식에 상관없이 국민이 우려하는 30개월이상 쇠고기가 못 들어온다는게 중요하다"는 말과도 같은 맥락이다.

더구나 지난 7일 부시 대통령까지 이명박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에 30개월이상 쇠고기가 수출되지 않도록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구두로 약속한만큼, 우리가 검역 재개 이후 30개월이상 쇠고기에 대해 조치를 취해도 미국 정부가 수입조건 위반으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30개월 라벨링(월령표시)이 없거나 '30개월이상'으로 표시된 쇠고기가 들어오면 정부가 직접 불합격시켜 반송·폐기하거나, 이에 정부는 검역을 거부하고 수입업자에 넘겨 자율 폐기·반송을 유도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 "재협상 때까지 투쟁" 강경 고수

야권은 주말인 7일에도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장외투쟁을 계속하면서 대야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표단과의 오찬에서 사실상 재협상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은 국민의 뜻에 정면 배치된다고 보고 "재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아침 일찍 72시간 릴레이 춧발집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시청 앞 광장을 방문해 시민단체와 시민들을 격려했다.

손 대표는 "천막을 치고 아스팔트 위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매우 마음이 아팠다"며 "당 대표로서 춧발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렇게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0일 6·10항쟁 21주년을 맞아 당 차원의 독자적인 집회를 갖지 않고, 춧발집회에 의원과 당직자들을 대대적으로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충남 예산·홍성에 내려가 축산업자 간담회를 갖고 현장 민심을 청취했다. /임동욱 기자 tuim@



꺼지지 않는 춧발

미 쇠고기 수입반대 72시간 춧발집회가 열린 7일 밤 서울 시청광장에서 남대문까지 이어진 태평로에 '협상 무효 고시철폐', '이명박 OUT' 등의 구호와 촛불이 물결치고 있다.

연합뉴스

"총언" VS "권력 쟁탈"

정두언 의원 "인적 쇄신" 직격탄...여권 술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으로 여권 내에 인적쇄신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측근들 사이에서 권력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공격의 표본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열었다. 정 의원은 7일 청와대 인사 3명과 의원 1명을 지목, "대통령 주변 일부 인사들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인적쇄

신 대상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대통령 주변 인사들에 의한 권력 사유화'를 주장했다. 이날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청와대 핵심 비서진 3명과 의원 1명을 '강·부·자, 고·소·영 내각' 등 국정난맥상의 진원지로 지목했다.

당장 정 의원이 지목한 인물이 '청와대 P비서관 등이다. L의원이다'는 등 이야기

가장기에 급속히 퍼지고 있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과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결국 대통령이 틀어잡고 하는 소리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정 의원이 지목한 것으로 관측되는 청와대 비서관을 겨냥, "총리의 역할을 제한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따라서 이번 인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상득 의원에겐 "대통령 측근 사이에서 있는 권력 알투 아니겠느냐"면서 권력 투쟁으로 해석했다. 당내에서는 권력 핵심에서 멀어진 것으로 알려진 정 의원의 불명분만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주) 조이트레블
 대표전화 (062) 234-3222
 팩스 062-234-3222

입원 - 30일차
 299,000
 399,000
 429,000
 389,000

상급실 30일
 550,000

국민연금(월) 270,000

신착출 한정 특가행사!

- ▶ 북경 / 만리장성 4월 329,000
- ▶ 북경(동방대학생) 무제한골프 4월 399,000
- ▶ 상해 / 항주 / 황산(黃山) 4월 469,000
- ▶ 상해 / 항주 / 황산(黃山) 5월 499,000
- ▶ 정사 / 팔가계 / 임제계 559,000
- ▶ 심정 / 백두산 799,000

▶ 홍콩(관람+자유) 4월 749,000
 ▶ 홍콩 / 마카오 / 실린 4월 829,000
 ▶ 홍콩 / 디즈니랜드 4월 829,000

한글스와 영국 / 아일랜드 5인(KO) 699,000

여행의 알수 8인 1,990,000

제주도 정기부위 패키지 3인 239,000

미국비자
 ▶ 미국비자(비자) 062-233-5900

중국비자
 ▶ 중국비자(비자) 062-233-5900